

| 3개 합의 도출, 주요 내용과 의미는 |

과거, 현재, 미래를 교차하는 세 가지 사회적 합의

이덕재 수석전문위원

이번 격월간 「사회적 대화」 3·4월호에서는 최근 각 회의체에서 이루어진 세 편의 합의문에 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19.2.19.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문」이다. 둘째는 '19.3.5.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19.2.18.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합의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문」이 그것이다.

이들 세 합의문 중 고용안전망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합의는 작년('18년) 7월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절 발족한 두 의제별 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진 성과물인 반면, 탄력근로에 관한 합의는 '18.11.5. 국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긴박한 일정 속에서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진 논의 결과물이다.

필자는 묘하게도 각각의 세 합의문 내용에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느낌을 받는다. 예컨대 탄력근로에 관한 합의에서는 지체된 과거를 보게 된다. OECD 국가들 중 경제적으로는 이미 10위권의 대국에 들어섰으나 오랫동안 최장노동시간 국가로 남아 있던 과거의 '그늘'을 읽게 되는 것이다. 사실 탄력근로에 관한 합의는 2018년 3월 주당 최대 52시간 상한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노동시간(정확히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기준이 이제야 제도화 된 '시간의 지체'인 것이다.

고용안전망에 관한 합의문에서는 현재 당면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직시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조선, 자동차 등을 필두로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 중화학 제조업 부문의 쇠락 충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한편, 저숙련 서비스 부문의 취약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확산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재편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실업보험)의 한계는 매우 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요구들이 지속되었는데 이번 고용안전망에 관한 합의 중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은 마침내 이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여러 제약 속에서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고용안전망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문을 열어젖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합의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미래에 관한 지배적인 주제로 자리매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노사정의 기본인식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다.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과 미지성 때문에 합의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 방향성을 도출했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번 세 합의 중 탄력근로에 관한 합의가 한국적 노동정치 및 노사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러 갈등 양상으로 분출되면서 합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과잉이념화로 몰려 간 부분이 무척 아쉽지만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여러 교훈과 의미들이 보다 탄탄한 사회적 대화의 자산으로 전환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필자는 세 합의문의 시간적 배열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세 합의문이 톱니바퀴처럼 상호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흔히 디지털 전환이 한편에서는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의한 노동시간의 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기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탄탄한 고용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꿈꾸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미래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세 합의문은 복합적으로 상호 맞물려 있는 중층적 층위들을 갖고 있다. 이들 층위들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긍정의 미래사회를 가늠해 본다.